

독일통일, 동·서독 주민의 정체성 형성과 게마인샤프트 복원*

김현정 동아대학교

논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 주민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독일정치는 경제적 발전과 사회이익을 위한 동서독 통일, 즉 게젤샤프트(Gesellschaft)를 추구하였으나, 동서독 주민은 이를 위한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 복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 본고에서는 40여년간의 분단 이후 독일통일은 외적으로 동독에 대한 서독의 흡수통일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내적으로 동·서독 주민의 게마인샤프트 복원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강조한다. 본고에서는 분단 시기 동서독 간 이주 및 교류 상황을 고찰하고, 포스트 통일 시기 동독 주민의 정체성 형성을 통한 독일의 게마인샤프트 복원 과정을 분석하였다.

주제어 : 독일 통일,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 오스탈기, 다문화

* 이 논문은 한국정치사회연구소·한국국회학회·10.18민주항쟁연구소가 2020년 10월 23일 대전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독일 통일 30년, 한반도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2020년 독일은 통일 30주년을 맞이하였다. 1990년 동·서독은 동독지역을 5개 신연방주로 나누어 서독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어냈다. 당해 10월 3일 독일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주 포츠담(Potsdam) 에서 열린 ‘통일 30주년’ 기념식에서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와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대통령은 통일 30주년을 맞아 ‘동서 간 격차’가 얼마나 좁혀졌는지를 알리는 것이 독일 정부의 화두임을 강조하였다.¹⁾ 통일 당시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 격차를 무시한 1:1 화폐교환은 당시 동독주민들이 서독으로 몰려오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겠지만 동독 경제의 붕괴를 촉진하였다. 동독 화폐의 과도한 평가절상이 결과적으로 동독 기업의 가격경쟁력 상실과 대량도산을 불러왔다(장용석 2010, 22).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은 한 세대가 지난 현재 녹색시대가 조성된 기념생태 공간으로 거듭났다. 통일 직후 동서 양 지역 간 격차가 현격하며, 동독 출신 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한 적도 있었다. 동독 출신 주민을 ‘오씨(Ossi)’로, 서독 주민들을 ‘베씨(Wessi)’라 칭하며 마음의 베를린 장벽(Berliner Mauer)이 유지되던 때도 있었으나, 통일 이후 한 세대가 지난 현재 당시의 지역 간 골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본고에서는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 주민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독일정치는 경제적 발전과 사회이익을 위한 동서독 통일, 즉 게젤샤프트(Gesellschaft)를 추구하였으나, 동서독 주민은 이를 위한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 복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 본고에서는 40여년간의 분단 이후 독일통일은 외적으로 동독에 대한 서독의 흡수통일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내적으로 동·서독 주민의 게마인샤프트 복원

1) 동아일보, “독일 통일 30주년 “동서 격차 크게 줄어왔다…강조한 이유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04/103234858/1> (검색일: 2020/10/4).

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강조한다.

본 논문은 첫째, 동·서독 간 인적교류 측면, 둘째, 통일 이후를 위한 인식의 전환과 통일 정치교육 측면, 셋째, 합의통일을 선택한 주민의 결정에 관하여 구성된다. 이러한 고찰은 현재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남북 간 인적교류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며, 정권마다 정치적 입장에 부합하는 통일교육이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통일은 요원하다. 독일통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흡수통일이라 이해하고 있지만, 결국 통일을 추동한 주체는 동·서독 주민이며, 주민의 결정에 따른 합의통일이었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분단 상황 하 정치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동서독은 인적교류와 통일을 위한 정치교육을 시행하며 통일 이후 국가와 사회의 정체성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인식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II. 통일, 게젤샤프트를 위한 게마인샤프트의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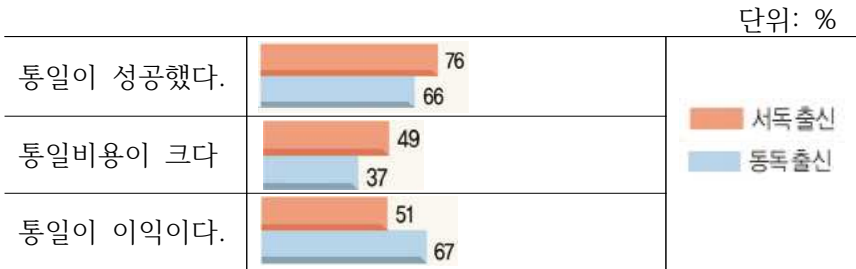
지난 2015년 독일 내에서는 통일 25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관한 독일인의 인식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서독 주민과 동독 주민이 각각 76%, 66%씩 찬성하며 총 73%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독일 통일을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통일로 인한 이익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서독주민 51%, 동독주민 67%가 ‘이익’이라고 답변했다.²⁾

독일은 통일 직후 정치, 경제, 사회 제반 측면에서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극복하고, 25년이 흐른 당시 통일에 대한 긍정적 사고가 70%(서독출신 주민 76%, 동독출신 주민 66%)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통일은 사회 이익의 측면에서 이해되는 듯하나, 실상 통일이익을 인식한다는 것은 정치·경제적 고려뿐 아니라 분단 이전 시기 사회의 복

2) 문화일보, “獨통일 25년… 오씨-베씨 사라진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00201071521301001>(검색일: 2020/10/4).

원이라는 지난한 과정을 요구한다. 동·서독 정부는 통일독일 건설을 통해 비용 대비 이익의 극대화, 경제적 성장, 즉 게젤샤프트 통일을 추구하며, 내부로부터의 하나의 통합된 사회, 정체성의 회복을 통한 기나긴 게마인샤프트 통일 과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표 1> 독일 통일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출처: 인프라테스트-디맵(Infratest-dimap), 도이치벨레(DW)

기존의 산업사회 발달과정에 관한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분단의 종식과 통일의 차원에 적용되면 목적과 사회통합, 복원의 과정이라는 일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통일은 제도적 통합을 통해 급격한 사회변화를 초래한다. 하지만 사회구성원의 통합은 장기적 시간을 소요시킨다. 단순한 체제의 흡수가 아닌, 게마인샤프트 사회를 복원하기 위해 ‘인정의 정치(the politics of recognition)’, 즉 이질집단 간 명확한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한 것이다. 동·서독 주민을 단순히 단일민족으로 간주하고 제도적 통일을 통해 하나의 국가, 국민으로 통합한다고 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 인정의 정치를 위해 킴리카(Kymlicka 1995)는 소수집단의 경우 더 큰 사회의 간섭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줄 강력한 자치권을 정당하게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은 별개의 사회적 문화를 지닌 독자적인 단일 정치체제를 형성하고, 중앙정부가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끔 ‘법적 권리의 문제로서 통치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하였다(설한 2010, 66). 개인의 집단적 문화정체성에

관한 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테일러(Charles Taylor)는 현대 정치적 현실에서 인간 존중의 자유주의적 권리 개념이 진정으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 자체가 정체성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테일러(Taylor)는 이런 정체성과 관련하여 정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상호인정(recognition)'이라 강조하였다. 그는 상호인정에서 아래 두 가지를 강조하였다. 첫째, 한 개인의 정체성이 상이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은, 한 개인의 정체성이 어떤 특정한 집단에 속하면서 생성된다는 점에서 상이한 집단의 문화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며, 둘째, 상호 인정의 실체는 소수자의 문화에 대한 다수자의 인정이라는 점, 즉 타자의 인정이 자신의 삶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자라는 것이다(김만권 2016, 283). 이주 혹은 독일의 경우와 같이 통일에 의해 주류사회와 소수자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면, 소수집단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통합 정책이 집중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단순히 게젤샤프트 사회 추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경제지원 및 노동기회 부여 등의 정책은 소수집단의 사회적 지위를 단기적으로 향상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주류집단의 반감을 부추긴다.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소수집단이 정착과 교육 등의 장기적 적응과 변화를 통해 주류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와 가능성, 즉 게마인샤프트의 복원이라 할 수 있다. 소수집단은 물론 주류사회의 시각에서 사회가 이분화되어 특정계층이 주변화(marginalization) 되어 각종 사회문제가 누적되는 것은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정체성은 정적인(static) 상태만이 아니라 동적인(dynamic) 과정을 포함하며, 자신의 집단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정책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집단적 의지가 포함된다(원숙연 2008, 35). 정책과정에의 편입(또는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의 권력 차이를 만드는 요인이 된다. 한마디로 여기서의 정체성은 생물학적 정체성이 아닌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즉 '정체성의 정치'로 포괄된다(장미경 2005; Ingram, et. al. 2007, 99).

<표 2> 소수자 정책 프레임

구분		정책의 방향성	
		포섭/편입	배제
정체성의 속성	명확/고정	동화(assimilation)	분리(segregation)
	불명확/유동	주변화 (marginalization)	해체(dissolution)

출처: (원숙연 2008, 36).

<표 2> 내 프레임에서 독일 통일 이후, 소수집단 지위로서의 동독인을 판단하면, 명확하고 고정된 정체성을 띠 때 동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독일정부가 동서독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동독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폭넓은 포섭 및 편입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독주민이 불명확하고 유동적인 정체성 속성을 띠다면 이들은 주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분단 시기 동서독 간 이주 및 교류 상황을 고찰하고, 포스트 통일 시기 동독 주민의 정체성 형성을 통한 독일의 게마인샤프트 복원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 분단 시기, 동·서독 간 이주 및 교류

1. 동·서독 간 이주

독일은 1949년 분단이 공식화되었으며, 1950년~1989년까지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주민은 총 4,868,699명으로, 연평균 11,780명이었다. 반면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주한 주민은 471,381명에 불과하였다. 당시 서독 및 서유럽 전역의 재건이 진행되었던 상황에서 서독이 경제발전, 즉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을 동독으로부터 보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표 3> 분단 이후 동서독 주민의 거주이전

시기	동→서	서→동	이전 편차	단위: 명 비고
1950-1961	3,854,552	400,315	3,454,237	장벽설치 이전
1962-1969	221,538	37,209	184,329	
1950-1989	4,868,699	471,381	4,397,31	총 거주이전 현황

출처: 염돈재, “<남북한 인적 교류 확대부터 시작하자> [염돈재 독일통일 이야기] 동독주민의 서독이주, 統獨 이루는데 핵심 동력”,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uciss&logNo=220019584429&proxyReferer=https:%2F%2Fm.search.daum.net%2Fsearch%3Fp%3D2%26q%3D%25EB%258F%2585%25EC%259D%25BC%2520%25ED%2586%25B5%25EC%259D%25BC%2520%25EC%25A3%25BC%25EB%25AF%25BC%26w%3Dfusion%26lv%3D1%26DA%3DTWA> (검색일: 2020/10/4).

1949년 분단된 이후부터 베를린 장벽 설치 이전 시기인 1950년~1961년 해당시기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인구규모는 매년 32만 명에 달한다(<표 3> 참조).³⁾ 장벽의 설치 이후 이동규모는 확연히 축소되었다. 동독인들의 서독이주 동기는 정치적 이유 56%, 경제적 이유 23%, 가정 및 개인적 이유였으며, 이주형식은 가족결합, 불법 탈출, 정치범 석방거래에 따른 이주 등으로 다양하다.⁴⁾ 시기별로 이주요인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1949년부터 1961년 베를린장벽 설치 전까지는 정치적 활동 및 사찰활동 강요, 양심 및 기본권침해 등을 주요 이유로 이주하였으나 베를린장벽 설치 후부터 1990년 통합이 시작되던 시기에는 정치적 동기 뿐 아니라 낮은 생활수준과 근로상황 등 열악한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허준영·정다원 2017, 64). 반면 동독으로 이주

3) 해당 자료에서 32만 명으로 추계하나, 다른 자료(유욱·이찬호·이경환·배용만·강구섭, 『분단시기 서독의 정착지원 정책의 변화과정과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1))에서 적게는 동 시기 매년 이동규모를 20만 명 규모로 추산하기도 한다.

4) Daily NK, "독일 통일의 밑거름 된 동서독 인적 교류", <https://www.dailynk.com/%EB%8F%85%EC%9D%BC-%ED%86%B5%EC%9D%BC%EC%9D%98-%EB%B0%91%EA%B1%B0%EB%A6%84-%EB%90%9C-%EB%8F%99%EC%84%9C%EB%8F%85-%EC%9D%B8%EC%A0%81/>(검색일: 2020/10/4).

한 서독주민은 대부분이 연금 생활자로 동독 내 가족재결합 목적의 이주가 주류를 차지하였다. 동서독 간 이주는 양측의 정치적 상황과 관계 변화에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분단 이후 동서독 간 이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건은 베를린 장벽의 설치라 하겠다. 1949~61년 250만 명에 달하는 동독의 기술자·전문직업인·지식인들이 서독행을 택함으로써 동독의 경제력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 결과 동독 인민회의의 결정으로 1961년 8월 12일 밤 서베를린으로 통하는 모든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한 장벽이 설치되었다.⁵⁾ 동독인이 서독으로 이주하는 방법은 동독 정부의 허가를 득한 합법이주와 비합법적 탈출 피난의 형태 두 가지가 있다.

<표 4> 동독탈출 이주민 현황(베를린 장벽 구축~붕괴 시까지)

연도	탈출 피난민		합법 이주민		총계
	동독정부 무허가	비율(%)	동독정부 허가	비율(%)	
1961	51,624	100	-	-	51,624
1962	16,741	78.4	4,624	21.6	21,365
1963	12,967	30.4	29,665	69.6	42,632
1964	11,864	28.3	30,012	71.7	41,876
1965	11,886	40.2	17,666	59.8	29,552
1966	8,456	35.0	15,675	65.0	24,131
1967	6,385	32.6	13,188	67.4	19,573
1968	4,902	30.6	11,134	69.4	16,036
1969	5,273	31.1	11,702	68.9	16,975
1970	5,047	28.8	12,472	71.2	17,519
1971	5,843	33.6	11,565	66.4	17,408
1972	5,537	32.3	11,627	67.7	17,164
1973	6,522	42.9	8,667	57.1	15,189

5) 다음백과, “베를린 장벽”,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09b2032a>, (검색일: 2020/10/4).

1974	5,324	40.2	7,928	59.8	13,252
1975	6,011	36.9	10,274	63.1	16,285
1976	5,110	33.7	10,058	66.3	15,168
1977	4,037	33.4	8,041	66.6	12,078
1978	3,846	31.7	8,271	68.3	12,117
1979	3,512	28.1	9,003	71.9	12,515
1980	3,988	31.2	8,775	68.8	12,763
1981	4,340	28.1	11,093	71.9	15,433
1982	4,095	31.0	9,113	69.0	13,208
1983	3,614	31.9	7,729	68.1	11,343
1984	5,992	14.6	34,982	85.4	40,974
1985	6,160	24.7	18,752	75.3	24,912
1986	6,196	23.7	19,982	76.3	26,178
1987	7,499	39.6	11,459	60.4	18,958
1988	11,893	29.9	27,939	70.1	39,832
1989	241,907	70.4	101,947	29.6	343,854
1990					238,384

출처: (유욱·이찬호·이경환·배용만·강구섭 2011, 19-20).

주지하다시피 분단 당시부터 베를린장벽 설치될 때까지는 동·서독 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정부 승인을 받은 합법이주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1961년 베를린장벽이 설치된 때부터 동서독 간 이주는 강한 압력을 받게 되었다. 장벽 설치가 알려진 당해 5만 여명의 동독 탈출 피난민이 발생한 이후, 다음 해인 1962년부터 동독정부의 엄중한 국경경비 및 특별사유에 대한 합법적 이주 허가 제도를 통해 탈출 피난민보다 합법이주민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동독 정부가 서독으로의 주민 이주를 결정하는 경우는 선별적으로 이루어졌다. 동독 정부는 고령자 중 동독을 위해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고, 서독에 연고자가 있는 사람에게 이주허가를 승인해 주었는데, 이중에는 서독정부와의 비밀거래를 통해 서독으로 이주시킨 동독 정치범이 포함되었

다(정혜영 2020, 205). 동독인구의 유출이 동독 사회 발전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한 동독 정부는 베를린 장벽을 비롯한 동서독 국경에 월경차단장치, 자동발사기를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해 동독주민들의 탈출을 봉쇄하려고 시도하고, 1982년에는 국경법을 제정, 탈출자에 대한 총기사용을 법제화했다(유욱 2011, 2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동독이주민이 죽음을 무릅쓰고 내독 국경 및 베를린 장벽을 통해 서독으로 탈출하였다(김영운 2010, 154). 그렇지만 불법 및 합법 이주를 합치더라도 장벽 설치 이전 시기에 비하면 이주민 수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감소했다(<표 4> 참조). 서독 기본법은 전승된 독일국적을 고수하여 동독 이주민을 국민으로 간주하였다. 혈통을 중심으로 부모 중 한쪽이 독일인이면 독일국적으로 보았는데, 그래서 연방영역에 거주하는 독일 혈통을 가진 사람들 뿐 아니라 1990년까지도 점령법상 연합국의 통치권 하에 있었던 동독과 베를린에 거주하는 독일인도 독일국적법의 의미에서 독일 국적자로 간주되었다(정혜영 2020, 205).

2. 동·서독 간 교류

동독정부가 특정 시기 주민의 서독 이주를 적극적으로 제한하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동·서독은 교류의 장을 완전히 닫은 적이 없다. 이는 이산가족 교류, 종교단체를 통한 동독지원, 여행자 왕래, 우편교류, 청소년교류, 예술인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되었다.

<표 5> 분단 독일 내 동·서독 간 민간교류

분류	교류 주체	교류 유형	내용
NGO 및 종교 단체	교회	원자재, 생필품 등 지원	- 1957년-1989년 약 28억DM(14억 달러)로 추정 원자재 지원 · 지원 품목들은 동독의 수입 허가를 받았으며 의류, 생필품, 건축자재, 냉장고 등 가전소비재, 의약품, 서

			<p>독의 현대식 의료기기 등이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nex를 통한 지원도 이루어졌는데, 지원 물품은 동독산 자동차부터 종자, 비료, 공산품 등 다양했음
	개신교, 카톨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7년-1989년 약 28억DM(14억 달러)로 추정 원자재 지원 · 총 지원액의 약 50%는 서독 정부의 재정 보조로 상당 동독정부는 원자재를 지원 받아 이를 동독 마르크로 환산해서 동독 교회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 사업 진행 · 공급한 원자재는 원유, 구리, 천연고무, 커피, 양모, 전기동 등
	프라이카우프	현금 및 현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3년-1989년 서독은 정치범 3만3,75명 교환과 25만 명의 이산가족 재결합을 위해 34.6억 DM(17.3억 달러)에 해당하는 현물을 동독에 지불 · 서독은 동독의 현금 지불 요구에도 불구하고, 처음 8명의 정치범에 대한 현금 지급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물을 제공(1983년까지는 1인당 4만 DM, 1983년 이후 9.6만 마르크 지불)
여행자, 면세점, 우편 등	당사자	여행자 물품 증여	1949년-1989년까지 여행자 왕래, Genex, 인터숍 등을 통한 직접 지원 규모는 약 176억 DM(8억 달러)로 추정
	Gene x		1962년-1989년까지 Genex를 통한 민간의 이전거래 규모는 약 26억 DM(약 13억 달러)로 추정
	인터숍		1974년-1989년까지 인터숍을 통한 증여는 약 10억 DM(약 50억 달러)로 추정
	우편	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독간 우편교류는 여행교류, 방문교류, 청소년교류 등의 인적 접촉 분야와는 달리 동독 측에 의해 완전히 단절된 적이 없는 분야임 · 1976년 3월 동서독간『우편 및 장거리통신 분야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동서독 간 우편교류의 제도적 기반 마련 · 1956년부터 1989년까지 소포 등 우편을 통한 이전거래(비상업적 거래) 규모는 약 450억 DM(25억 달러)로 추정
특정 집단 교류	청소년 교류		서독의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대동독 견학여행을 장려, 청소년여행에 대한 교통비 및 체류비 지원
	예술인 교류		서독은 동독예술인이 서독을 방문하면 일비를 지불, 교류협력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각각 50%씩 부담

주: Genex는 동독이 외화획득을 위해 해외에서 운영한 면세점으로 서독주민들이 동독에 있는 친지들에게 물품을 보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음.

출처: (이해정 2013, 3-6).

<표 5>에서와 같이, 분단 독일 내 동·서독 간 민간교류는 전방위적 영역에서 시행되었다. 이는 첫째, NGO 및 종교단체 등에 의한 원자재 및 생필품 등의 지원, 둘째, 여행자, Genex 면세점 및 인터숍 이용에 의한 양독간 이전거래, 셋째, 우편교류, 넷째, 예술인 및 청소년 교류 등에 해당한다.

<표 6>은 동·서독의 도시간 자매결연 교류 내용이다. 1986년 4월 양측 간 도시자매결연 협정이 체결된 이래 총 73건의 도시간 자매결연이 성사되었다.

<표 6> 동·서독의 도시간 자매결연 교류 내용

분야		내용
체육 문화	교환경기	- 볼링, 축구, 탁구 등의 종목으로 광범위한 주민 참여 유도
	문화행사	- 전시회, 음악회, 영화상영, 작가들의 초청강연 등
	신문교환	- 16개 도시에서 지방신문 상호 교환
전문가회의		- 지방자치 및 지역행정에 관한 의견 및 경험교환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개최 · 도시계획, 노후화된 주택정비, 도로교통 계획 - 환경문제, 자영수공업자, 의사, 노동자 및 노조원 의견 교환 등
청소년 상호방문		- 15~30세 사이의 청소년 상호 방문

출처: 통일원, 『동서독교류협력 사례집』 (1993), pp. 723-724.

도시간 자매결연 교류의 세부내용은 체육행사, 문화행사, 신문교환, 전문가회의 및 청소년 상호방문 등으로 진행되었다.

IV. 포스트 통일, 게마인샤프트 복원과 동독 주민의 정체성

1. 동서독 사회통합 및 정체성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

서독은 통일을 대비하여 분단 시기 일관성 있는 통일교육을 시행해왔다. 서독의 통일교육은 정치교육의 한 부분으로 시행되었으며, 학교 통일교육 및 시민통일교육의 이원적 형태로 운영되었다. 서독의 정치교

육은 통일교육과 함께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및 국제이해교육을 포괄하며, 이는 분단 종식 이후에도 사회통합을 위한 조정 이외에 큰 변화를 겪지 않았다. 분단 시기 서독은 사회통일교육, 즉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전쟁을 겪은 이후 분단 상황에 처한 서독 사회는 국가를 재건하고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최대 과제로 민주주의의 정착을 필요로 했다. 이를 위해 서독 정부는 「연방정치교육본부설치법」을 제정, “연방정치교육본부”(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라는 국가기관을 세우고, “정치교육”이라는 이름 아래서 독일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함양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주무기관으로 내독성(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을 설치하였고, 연방정치교육본부 역시 정치교육적 차원에서 통일교육을 다루었다(김창환·양금희·윤재홍 2002, 10).

분단 시기 서독의 통일교육은 4단계 시기별로 구분하여, 1945년~1949년은 의식화 교육 과정, 1949년~1964년 철학적·교육적 기초 확립 과정, 1960년~1970년 사회과학적 정향성 확립 과정 그리고 1970년~1985년 교수법의 체계화 과정으로 진전되었다. 시기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45년~1949년은 의식화 교육 과정에는 독일 민주화 촉진을 위해 정치교육 활성화가 강조되며, 시민의식 배양, 민주적 생활양식 창출, 민주주의적 문화 창출, 교사 재교육, 사회 교과서 수정하는 교육체제 전환을 진행하였다. 둘째, 1949년~1964년 철학적·교육적 기초 확립 과정에는 서독 문화주권 차원에서 학교 내 정치교육 관장을 제시하여, 정치교육이 기본목표로서 공동체 교육과 제도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셋째, 1960년~1970년 사회과학적 정향성 확립 과정을 통해 교육철학적인 이론이 정치교육의 교수법으로 이행되는 과정을 추진하였다. 해당 시기 갈등 및 비판 개념이 정치교육의 핵심 사안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1970년~1985년 교수법의 체계화 과정을 통해 특수성을 토대로 일반성을 인식해 나아가는 인지와 인식을 통한 사례 교육을 정치교육 방식을 채택해 나아갔다(황병덕 1995, 7-15).

서독의 통일교육은 1972년 ‘기본조약’이 국제법 승인을 득하여 양독 관계 정상화가 진전된 이후 큰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이전 시기 이데

올로기와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양측 간 비난과 상호 독자적 국가임을 강조하던 정치교육에서 상호 이해 및 통일에 초점을 둔 정치교육으로 변화하였다.

<표 7> 서독 정치교육의 기본목표

-
-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과정들의 요소와 기능관계에 대해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알려준다.
 - 자유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들을, 물론 구체적 실현방법에 대한 지속적 비판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수용하게끔 하는데 기여한다.
 - 자유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민주주의가 유일한 정치질서임을 분명히 한다. 동시에 이 질서체제 속에서만 독자적, 합리적, 자기책임적인 행위가 가능하고 또 그러한 행위만이 체제부적합적이며, 이 질서체제야말로 각 개인의 자기발전을 위해 가장 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 민주주의적 게임규칙의 본질을 인식시키고, 민주주의적 절차의 진행방법을 습득하게 하며, 비판력과 합의자세를 동시에 갖도록 교육한다.
 - 정치적 대안 속에서 고려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길러주며, 정치적 문제의식과 판단력을 길러준다.
 - 정치적 행위능력을 발전시키며, 정치적·사회적 영향력 행사의 기회를 인식시키며, 이를 활용케 한다.
 - 언어적 및 상징적 의사소통을 이데올로기적인 배경 위에서 관찰하게끔 한다.
 - 자신의 권리 및 이익 상황을 자신과 타인과의 입장관계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 자신의 이익을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규칙의 범위 내에서 인식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 상이한 출신과 문화권 소속의 사람들이 상호 이해하며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자세를 길러준다.
 - 민족적 이기주의의 타파에 힘쓴다.
 - 성찰된 참여와 책임있는 정치적, 사회적 행위능력과 자세를 갖추게끔 한다.
-

출처: (박병석 1996, 241).

정치, 사회, 경제적 과정들의 기능에 대한 습득, 자유주의 및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에 관한 인식과 학습, 민주주의 절차의 습득과 권리와 책임에 관한 인식 등을 망라하고 있는 정치교육의 기본목표는 학습자들이 이를 통해 정치사회화해 나아가는 과정을 실현해 나아가는데 있다고 판단된다(황기식 2015, 237).

이와 같이 서독지역은 적어도 72년 이후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목표가 반영된 통일교육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통합의 교육으로 이행해 나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동동지역민에게 통일 이후 통일교육은 기존의 체제와 질서가 부정되는 내용을 담을 수 있기에 포스트 통일교육의 과제를 남긴 것이다.

2. 통일 이후 독일 주민의 정체성

동·서독은 서로 다른 정치체제와 경제구조 하 분단된 상황에서 40여년이 경과한 이후, 갑작스런 통일을 맞이하였다. 1990년 3월 18일 400석의 의석을 두고 순수 비례대표제에 입각한 조기총선거가 결정되었으며, 24개 정당이 경쟁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93.4%가 참여한 선거에서 당시 서독의 집권당이었던 기민당(CDU)과 제휴한 동독 기민당이 주축이 된 독일연합이 48%(사회민주당(SPD)은 22%)의 지지를 얻어 승리하였다(장용석 2010, 23). 정치, 사회, 교육 등 다방면에서 통일을 지향해왔으나, 정치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내부 주민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한 환경을 맞이하여 생활해 나아갈지에 관한 숙고가 미흡했다. 독일은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 관련한 제 문제들이 드러나며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오스탈기(Ostalgie)’의 물결이 대중매체에 까지 등장하는 등 여러 형태로 범람하면서, 과거에 대한 몽상적인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권혁준 2009, 198). 오스탈기는 독특한 문화적 현상으로서 주로 동독 제품들에 대한 애착과 동독을 주제로 한 문화 상품의 성세와 구 동독 시절의 의미 있는 성취에 대한 자의식으로 발현한 것이며, 동독정체성은 한편으로 오스탈기 현상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서독인들과의 경계정체성을 통해 동독인으로서의 자의식을 발전시킴으로써 형성되었다(이동기 2016, 29).

그렇다면 이와 같이 통일 이후에도 이어지는 동·서독 각각의 정체성 형성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통일 뒤 동독 지역에서 생겨난 동독 주민들의 집단적 정체성은 경험과 기억에 근거한 이야기 공동체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그것은 정치 현실이나 경제 상황에 대한 해석이나 미래 전망과 연관되기보다는 이미 사라진 동독 사회에 대한 집단적 경험과 기억에 의거하고 있다.⁶⁾ 분단의 경험과 기억을 뚜렷이

간직한 이들에게 통일이후 시행되는 사회통합 정책과 정치교육으로 온전히 하나의 정치공동체 국민정체성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베리(Berry 1997)는 ‘이민, 문화적 동화와 적응(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외 다수의 후속 연구를 통해 다문화주의에 관한 두 가지 차원, 네 가지 결과의 범주화한 문화적응 모형을 제시하였다. 문화적응 모형 내 두 가지 차원이란 첫째,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와, 둘째, 주류 사회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로 분류되며, 모국의 문화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동시에 받아들이면 통합(integration), 모국의 문화는 유지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만을 받아들이면 동화(assimilation),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리(separation),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지도 못하면서 새로운 문화와도 접촉을 하지 못하면 주변화(mainstreaming)가 된다(조정아·임순희·정진경 2006, 8). 분단의 시기와 통일을 경험한 세대에게 단순히 하나의 민족임을 강조하는 사회통합정책을 투사하면, 대상 주민의 정체성 속성에 따라, 정체성이 명확하고 고정된 경우 동화될 수 있으나, 불명확한 경우 주변화 현상을 겪게 된다. 안드레아 켐프리니(Andrea Semprini) 외 다수의 연구자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차별과 배제의 극복 그리고 이들 집단의 다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김현정·박선화 2016, 168). 서독 주민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통일 이후의 독일이라는 공동체 공간을 다원주의가 공존하는 영역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통일 직전 동독 정치사상교육 개혁은 기존 이념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아, 1989년 11월 학교에서 실시되던 군사훈련이 폐지되고, 이듬해 2월에는 국가시민과목을 사회과목으로 대체하면서 동독 교과서 대신 서독 교과서로 수업을 하며, 또한 학교에서 사통당 조

6) 이동기, “결코 사라지지 않을 동독 통일 뒤 동독 문화 폐기 움직임에 대한 문화적 저항이 외려 동독 정체성 강화 가져와… 내적 변화 없는 전환은 ‘횡포’일 뿐”, 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38384.html (검색일: 2020/10/4).

직과 자유독일청소년연맹을 해체함으로써 학교 교육에서 당이 간섭할 공간을 없애고자 노력하였다.⁷⁾ 하지만 이와 같은 수정된 교육의 기간은 불과 1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독의 입장에서는 통일교육적 측면에서 준비없는 통일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에 독일정부는 정부 자체에서 통일교육을 관리하지 않고, 연방정치교육센터를 두어 정치 중립적이고 일관성 있는 포스트 통일교육을 추진해 왔다.⁸⁾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조직상 연방정부 내무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예산은 사실상 내무부와 독립적으로 집행, 운용하고 있으며, 의회 상황을 연방정치교육센터에 그대로 반영해 각 정당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례상 연방정치교육센터장은 일반적으로 여당 추천 인사가 맡고 부센터장은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맡으며, 22인의 여야 연방하원의원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가 존재하도록 구성하고 있다.⁹⁾

V. 결론 및 시사점

본 논문에서는 독일 통일에서의 동서독 주민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였다. 분단 시기, 동·서독 간 이주는 서독의 역할과 더불어 여러 요인에 의하여 추동되었다. 또한 양독 간은 민간단체를 활용한 물적교류 및 이산가족 교류, 청소년 교류, 예술집단 교류 등의 인적교류, 면세점 등을 이용한 지원활동 교류, 우편교류 등 다각도로 진행되었다.

현재의 독일은 동서독 출신 주민이 함께 하는 국가정체성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의 유럽정체성을 아우르고 있다. 뿐만 아니

7) 통일부, “<독일이 통합을 알려줘> 통일교육 ③ 통일 이후 흔들리는 동독 출신 청소년들과 통일교육”,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unikorea&logNo=221657851567>(검색일: 2020/10/4).

8) ‘포스트 통일’이란 신조어는 단순히 통일 이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박영균(2016)은 ‘포스트 통일’을 독일통일 이후 나타난 동독과 서독 주민 사이의 사회문화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하였다. 그는 ‘포스트 통일’이라는 신조어를 통일의 여러 화두 중 하나로 주제화하였다.

9) 통일부, “<독일이 통합을 알려줘> 통일교육 ④ 독일 통일교육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unikorea&logNo=221657860750> (검색일: 2020/10/4).

라, 독일은 유럽연합(EU) 이외의 유럽 출신 이주민, 제3 지역 이주민과 난민이 혼종된 지역이다. 독일이 한 민족으로 통일의 당위성만을 강조하여, 동독주민에게 일방적 사회통합을 주장한다면 이들의 대부분은 주변화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마지막 분단 지역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할 것이다.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과 북이 가진 가치-정서-문화적 차이들을 억압 또는 배제하는 ‘폭력’으로 전화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을 민족동질성의 회복으로 보고 이를 만들어가는 방안을 찾는 것은 오히려 통일에 저해 요소가 될 뿐이다(박영균 2016, 148).

독일은 분단과 통일을 경험할 국민에게 정치적 행위능력과 의사소통 방식,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규범 및 정치적 대안 속에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교육해 왔다. 그렇다면 분단 종식 이후 30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여전히 동·서독 주민이 상호 간 차이를 느끼는 현 상황에 대해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권혁준. “통일 이후 동독주민의 정체성 위기와 오스탈기 - 옌스 슈파르 슈의 『실내분수대』.” 『카프카연구』. 제272호, 2009.
- 김만권. 2016. 『그림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개마고원.
- 김영윤. 2010. “구동독 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구서독 정부의 정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설자료집』. 대한변호사협회.
- 김창환·양금희·윤재홍. 2002.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태 분석』. 통일부.
- 김현정·박선화. 2016. “다문화정책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문제.” 『통일인문학』. 제66호.
- 박병석. 1996. “정치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통일독일에서의 정치교육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6호.
- 설한. 2010. “김리카(Kymlicka)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좋은 삶, 자율성, 그리고 문화.” 『한국정치학회보』. 제44집 1호.
- 원숙연. 2008.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제42권 3호.
- 유욱·이찬호·이경환·배용만·강구섭. 2011. 『분단시기 서독의 정착지원 정책의 변화과정과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이동기. 2016. “독일통일 후 동독정체성: 오스탈기는 통합의 걸림돌인가?” 『역사와 세계』. 제50집.
- 이해정. 2013. “독일 사례를 통해 본 통일 기반 여건 조성 방안.” 『현안과 과제』. 13-48호.
- 장미경. 2005. “한국사회 소수자와 시민권의 정치.” 『한국사회학』. 제39권 6호.
- 장용석. 2010. “독일통일, 동독주민이 선택한 합의 통일.” 『통일한국』. 통권 322호.
- 정혜영. 2020. “동독이탈주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 보장에 관한 헌법적

- 문제: 이주민 긴급수용법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21권 1호.
- 조정아·임순희·정진경. 2006.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통일원. 1993. 『동서독교류협력 사례집』. 통일원.
- 허준영·정다원. 2017. “인권과 행정관리의 절충적 국경관리? -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수용원칙과 실제 -”, 『Crisisonomy』 제13권 제10호.
- 황기식.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독일 통일교육과 한국에의 시사점.” 『유럽 연구』, 제33권 제4호, 2015.
- 황병덕.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 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민족통일연구원, 1995.

2. 외국문헌

- Ingram, H., Schneider. 2007. A., & Deleon, P.. *Social Construction and Policy Design*.
- Kimlicka, Will and Keith Banting. 2006. “Immigration, Multiculturalism, and the Welfare State”, *Eth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Carnegie Council for Ethics in International Affairs.

3. 기타

- 다음백과, “베를린 장벽”,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09b2032a>, 2020. 10. 04.
- 동아일보, “독일 통일 30주년 “동서 격차 크게 줄여왔다…강조한 이유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04/103234858/1>(검색일: 2020/10/4).
- 문화일보, “獨통일 25년… 오씨-베씨 사라진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00201071521301001> (검색일: 2020 /10/4).
- 염돈재, “<남북한 인적 교류 확대부터 시작하자> [염돈재 독일통일 이야기] 동독주민의 서독이주, 統獨 이루는데 핵심 동력”,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uciss&logNo=220019584429&proxyReferer=https:%2F%2Fm.search.daum.net%2Fsearch%3Fp%3D2%26q%3D%25EB%258F%2585>

%25EC%259D%25BC%2520%25ED%2586%25B5%25EC%259D
%25BC%2520%25EC%25A3%25BC%25EB%25AF%25BC%26w
%3Dfusion%26lv%3D1%26DA%3DTWA(검색일: 2020/10/4).

이동기, “결코 사라지지 않을 동독 통일 뒤 동독 문화 폐기 움직임에 대한 문화적 저항이 외려 동독 정체성 강화 가져와… 내적 변화 없는 전환은 ‘횡포’일 뿐”, 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38384.html, 2020. 10. 4.

통일부, “<독일이 통합을 알려줘> 통일교육: ③ 통일 이후 흔들리는 동독 출신 청소년들과 통일교육”,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unikorea&logNo=221657851567>(검색일: 2020/ 10/4).

통일부, “<독일이 통합을 알려줘> 통일교육: ④ 독일 통일교육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unikorea&logNo=221657860750>, (검색일: 2020/10/4).

Daily NK, “독일 통일의 밑거름 된 동서독 인적 교류”, <https://www.dailynk.com/%EB%8F%85%EC%9D%BC-%ED%86%B5%EC%9D%BC%EC%9D%98-%EB%B0%91%EA%B1%B0%EB%A6%84-%EB%90%9C-%EB%8F%99%EC%84%9C%EB%8F%85-%EC%9D%B8%EC%A0%81/>, 2020. 10. 4.

투고일 : 2020년 11월 15일 . 심사일 : 2020년 11월 23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12월 3일
--

* 김현정은 동아대학교에서 국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대표 논문으로는 “브렉시트 전후 영국-EU간 이주 흐름의 구조적 변화: 세계체제이론 관점에서”, “유로존 위기를 통해 본 이중 속도 유럽에 관한 논의: 비세 그라드 그룹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관심분야는 국제정치경제 및 유럽지역연구다.

<Abstract>

German Unification, the Formation of Identity of East and West German Residents and the Restoration of the Gemeinschaft

KIM, HyunJung
(Dong-A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ole of East and West German residents in the process of German unification. German politics pursued East-West German unification for the Gesellschaft,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benefits, but East-West German residents have been working to restore Gemeinschaft for this. In this paper, after 40 years of division, German unification has the form of absorption unification of West Germany to East Germany externally, but it emphasizes that it is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restoration of Gemeinschaft of East and West German residents internally. This study examined the migration and exchange situation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during the division period and analyzed the process of German restoration of Gemeinschaft through the formation of identity of East German residents during the post-unification period.

Keywords : German unification, Gemeinschaft, Gesellschaft, Ostalgie, multiculturalism